

# 21세기 한국경제의 살 길은 재벌체제의 실질적인 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다<sup>(1)</sup>

박 승 호

## 1. 21세기 한국자본주의의 특징

21세기 한국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력 발달은 세계 14위의 GDP 규모와 재벌들이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패러다임이 개편된 자본주의이다.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재벌과 정부는 신경영, 신노동, 세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97년 IMF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한국자본주의는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에 깊숙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는 과거의 ‘압축성장’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압축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유연화와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재벌들이 한국계 초국적 자본으로서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들에 자본수출을 하는 ‘아류-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계급모순에서 비롯된 사회양극화와 공황으로 표현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극단적으로 증폭시켰다. 2008년 세계 금융공황으로 표출되고 또 그 이후 장기불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21세기 세계대공황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후의 세계대공황에서 OECD 나라들 가운데 독일과 한국만이 예외적인 사례로 일시적이지만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

---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는 쟁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었다. 그러나 2014년 현재는 독일도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경기하강 기조로 전환되었고, 한국도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공포를 예외 없이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이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점이다. 노동의 유연화, 탈규제와 자유화, 세계화 등은 한국자본주의만의 특징이 아닌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보편적 특징인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세계화가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한국자본주의를 규정하는 첫 번째 특징이다.

한국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재벌체제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체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독점자본 등장 이래의 보편적 특징에 더하여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재벌체제’라는 특징을 말한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금융과두제’와 유사하고 1930년대 일본의 ‘재벌’과 유사한 특징이다. 21세기 지구적 자본주의에서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한국의 재벌에 필적하는 체제는 없으므로 재벌체제는 한국자본주의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를 주도하고 또 지배하고 있는 재벌의 민낯은 최근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이 땅의 재벌은 법 위에 존재하고 있고, 한국사회에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통해 삼성의 후계자 승계를 위한 불법·비리와 뇌물 증여 등이 폭로되자 2006년 삼성그룹은 8천억 원의 사회공헌금을 내고 소유·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역시 똑같은 후계자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1조 원의 사회공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았다. 금권정치의 실상은 2007년 삼성그룹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에 의해 구체적으로 폭로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2010년 경제회생을 명분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초유의 ‘단독사면’을 내렸고,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2012년, 2014년의 최종판결도 무시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들의 초법적인 금권정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국자본주의에서 재벌체제의 성격변화에 대해 일찍이 고(故) 김기원 교수는 ‘정부

(2) 김용철(2010):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우위의 정경유착'에서 '재벌 우위의 정경유착'으로 바뀌었고, 한국사회가 군사독재에서 재벌독재로 변화되었다고 갈파했다. 그는 재벌독재를 재벌의 대표주자이자 재벌 내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을 빗대어 '삼성 독재'로 표현했다. "삼성 독재'를 혁파하는 삼성 개혁이 필요하다. 삼성 독재란 삼성 내부적으로는 총수의 독재체제가 자리잡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삼성이 국민경제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이중적 독재체제'다. 물론 군사독재에 비해 삼성독재는 덜 폭력적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긴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선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sup>(3)</sup>

재벌들은 정계에 정치자금을 대주고 특혜 등을 로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검찰·지식경제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뇌물을 통해 로비를 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재벌들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 측면에서 독보적이다. 삼성은 이른바 '떡값'을 주고 양성한 '삼성장학생'들을 통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데올로기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권력이 삼성에 넘어갔다'는 말이 유행했겠는가.

재벌독재는 이처럼 초법적일 뿐 아니라 폭력적이기도 하다. 재벌들의 '무노조 경영'이 대표적이다. 현대차 그룹에만 예외적으로 민주노조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재벌들은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삼성이 재벌들을 대표한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 인권을 유린해 왔다. 미행, 감시, 강제발령, 납치와 감금, 해고, 구속, 인간관계를 이용한 온갖 회유와 협박, 그리고 핸드폰 불법복제와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위촉추적, 경찰 및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 건설 원천봉쇄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켜 왔다. 삼성 계열사뿐 아니라 삼성 하청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까지 무노조 경영을 강요하며 탄압해 왔다. 두 명의 노동열사가 나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 최근의 사례이다.

재벌독재가 기업 내부적으로 얼마나 독재적이고 인간과괴적인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것이 2011년 삼성전자 26세 청년노동자 김주현의 자살사건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하의 노자관계의 실상이 세상에 알

(3) 김기원(2005): 「'삼성 독재'의 현실과 개혁 방향」, 『역사비평』 2005, 가을호(통권 72호), p.29.

려지게 되었다. 삼성전자 노동자가 하루 14~15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고 1~2개월에 겨우 한번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잔업, 특근이 강제되었다. 그래서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잔업·특근으로 받은 월급이 300~400만원이나 되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다. 무의미하다. 상급자들이 밥도 안 먹고 일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해’라고 시킨다.” 그는 자동화된 최첨단 설비에 부속품으로 예속되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억압적 통제 하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파괴되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의 자살사건만 6건이 제보될 정도로 2009년부터 노동자들의 자살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의 직업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직업병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재벌독재는 재벌기업 외적으로는 국민경제, 즉 한국경제를 양극화시켜 붕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 2. 한국자본주의의 붕괴 위기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또는 위기적 현상은 모두가 인정한다. 재벌(특히 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 양극화,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양극화, 노동계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자영업의 높은 비중, 높은 수출의존도,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 저성장 등등.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적 문제들 간의 연관과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있다. 이에 대한 진단에 따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달라진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야말로 모든 문제의 원천이고, 또 그 집중 수준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은 2003년 48.4%에서 2012년 84%로, 매출은 2003년 50.6%에서 2012년 84.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2%에 그쳤는데, 10대 재벌의 연평균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0.93%와 7.69%에 달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은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있을 수 있는 일반적 수

준이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sup>(4)</sup>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말 기준으로 미국 15.1%, 일본 22.0%, 프랑스 29.4%, 독일 30.1% 등인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47.1%에 이른다. 범4대 재벌가(삼성, 현대, SK, LG)의 GDP 대비 자산비중은 2000년 45.82%에서 2012년 말 69.74%로 1.5배 증가했다. 범4대 재벌가의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9%에서 25.6%로 증가했다. 총수 있는 30대 재벌(금융법인 제외)의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비 금융법인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7%에서 2012년 37.4%로 증가했다. 또한 이런 경제력 집중은 당연히 광공업 부문에서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

재벌로의 이런 경제력 집중은 이른바 황제경영식 소유·지배구조에 의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 주식소유 현황’(2014. 4. 1. 기준)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있는 40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4.7%에 달했다. 재벌 총수 일가는 4.2%의 지분을 소유하고서 1,420개의 계열기업들을 거느리며, 이들 그룹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24개 기업집단은 117개의 금융·보험 기관을 사금고로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황제경영식 소유·지배구조는 IMF사태 이후 개선되기는커녕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계속 악화되어 왔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총수 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1997년 각각 2.5%, 42.7%에서 2007년 1.3%, 47.9%로, 그리고 2014년 0.9%, 52.5%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더욱 커졌다.

재벌은 이런 막대한 자본축적과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권정치를 구사하며 재벌독재 시대를 열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현재와 같이 극단적으로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은 재벌이다. 재벌들은 IMF사태 이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시작했다. 삼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며 ‘신경영’을 선도했고, 대우그룹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세계경영을 주도했다. 재벌들의 이런 주도에 따라 김영삼 정권은 ‘신노동’ 정책과 ‘세계화’ 정책

(4) 위평량(2014):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1987-2012)」, 경제개혁연구소(2014): 『경제개혁리포트』 2014, 2(2014년 2월 11일).

으로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했다. 소사장제 등으로부터 시작한 노동의 유연화·차별화 공세는 노동계급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여타 중소기업(외주하청)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극화시켜 중소기업·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IMF사태는 재벌들이 신자유주의 전략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삼성자동차 진출 실패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삼성은 ‘평생직장’이라는 삼성신화를 깨고 1997년 말~1999년 말까지 2년 동안 16만 7천 명의 총 고용 노동자 가운데 그 32%에 달하는 5만 4천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을 실시했다.<sup>(5)</sup> 재벌 대기업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에 의한 조기퇴직 등 정리해고는 ‘사오정’(45세 이상은 정리해고 대상)이란 말을 유행시켰고, 이렇게 밀려난 정리해고자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려 자영업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

재벌들은 또한 하청계열화된 중소기업들을 수탈했다. 재벌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독점자로서 시장에서의 지배/종속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납품가격 결정과 가격 인하, 대금 지급기일의 지연, 납품 발주의 부당한 취소, 중소기업 기술의 부당한 탈취 등의 방법으로 하청중소기업들을 수탈했다. 더 나아가 하청중소기업의 임금결정에도 직접 개입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고, 비정규직화와 2차·3차 재하청화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강제했다. 재벌들의 이런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은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sup>(6)</sup>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계급의 빈곤화와 그로 인한 내수기반 중소기업의 정체와 몰락, 그리고 재벌들의 수탈로 인한 하청중소기업의 정체와 몰락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이중화를 심화시켜 왔다. 재벌 주도의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내수산업이 갈수록 양극화되어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재벌의 수출 증가와 성장이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자동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노자관계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등 사회관계에서의 초과착취와 수탈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중소

(5) 송원근(2008):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조돈문·이병천·송원근 엮음, 후마니타스), p.33.

(6) 이상호(2011): 「한국 자동차산업 불공정 하도급관계의 실태와 정책대안-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년 제8권 제2호.

기업의 자본투자가 부족하여 대기업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저이윤과 저임금이 필연적이라는 설명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하고 있다. 왜 중소기업의 자본투자가 부족한가? 재벌대기업의 수탈 때문이 아닌가?)

‘재벌 우위의 정경유착’에 의한 금권정치는 재벌의 수출 증대를 위한 한미FTA, 한·유럽연합FTA, 한·중FTA 등 무차별적인 전면개방정책을 실시하게 했고, 농산물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을 해체시키고 농민을 몰락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이어 골목형 대형마트 등 골목상권에 까지 침투한 재벌 대기업에 의해 소상공인 등 독립자영업자들도 더욱 몰락해 가고 있다.

이처럼 재벌의 황제경영식 소유·지배구조와 그에 의한 경제적 지배력이 급속히 확장될수록 재벌을 제외한 노동계급, 농민·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빈곤화·몰락해 가고, 중소기업들도 몰락해 감으로써 국민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붕괴 위기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고용 노동자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0%이며, 저임금계층은 24.5%로 OECD 나라 가운데 가장 많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4년 8월 현재 227만 명(12.1%)이다.<sup>(7)</sup>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2014년 54.4%로 더욱 낮아졌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개인소득을 분석한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sup>(8)</sup> 2010년 기준 개인소득자 3,122만 명 가운데, 1천만원 미만 48.4%, 1천만~4천만원 37.4%, 4천만~1억원 12.4%, 1억원 이상 1.8%이다. 1천만원 미만의 소득자 가운데 2/3가 500만원 미만이다. 전체 평균소득이 2,046만원이지만, 중위소득은 1,074만원(평균소득의

(7)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608만 명(32.4%)으로 추정하나, 김유선에 의하면 이는 정부가 분류를 잘못된 것으로 852만 명(45.4%)이 맞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 선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김유선(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결과」, 『KLSI 이슈페이퍼』 2014-22(2014년 11월).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1만 명(43.8%)로 간접고용이 148만 명(33.9%), 직접고용이 43만 명(9.9%)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김유선(2014):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4년 3월 현재)」, 『KLSI 이슈페이퍼』 2014-19(2014년 7월).

(8) 김낙년(2014):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2014, 12.

52.5%)에 불과하다. 반면에,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48.05%,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97%이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의 가계조사 등 통계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 분석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분배 악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현실과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계급 내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과 자영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 86%에 달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된다. 또 중위소득이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노동계급과 자영업자들의 빈곤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사회양극화와 빈곤화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이다. 청년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는 현실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88만원 세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고,<sup>(9)</sup> 노인들의 빈곤과 곤경은 OECD 최고의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sup>(10)</sup>

또한 사회양극화와 빈곤화의 급속한 진행은 최근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이야기되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했다. 국민경제가 붕괴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다. 2014년 9월 말 기준 1천 60조 원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5%로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더 나아가 빈곤화와 가계부채의 급증은 만성적인 내수 부족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13년 54%로 급속히 증가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초래했다. 또한 재벌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귀결되었다.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6월말 현재 477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자본주의는 현재의 재벌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9) 통계청이 2014년 11월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공무원시험 등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정규직을 원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10월 기준 10.1%로 공식 실업률(3.2%)의 3배가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는 10월 기준 287만5000명으로 공식 실업자(85만8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1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또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역시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이처럼 높은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10년째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의 빈곤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해결책은 재벌체제의 실질적인 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다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체제가 해체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벌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국민경제 붕괴의 원흉이 재벌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어떠한 개혁도 재벌독재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군사독재 하에서 어떤 작은 민주화도 불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독재 하에서는 어떤 작은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독재가 청산되어야 했고 청산되었듯이, 재벌독재도 청산되어야 하고 청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재벌은 해체될 수 있다. 2012년 이스라엘 정부는 경제력을 집중한 20대 재벌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재벌의 금산분리를 법제화함으로써 재벌해체를 결정했다. 물가폭등과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이런 재벌해체의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전례도 많다. 금융과두제로서 재벌이 해체된 경우에는 1911년 미국의 록펠러 재벌, 1933년 J. P. 모건 재벌, 그리고 1945년 패전 후 일본의 재벌들 등이 법에 의해 해체된 대표적 사례이다.

21세기 세계대공황 상황이 재벌해체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즉 지구적 자본주의는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래 6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불황 또는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장기불황을 ‘뉴 노멀(new normal)’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유럽을 필두로 선진국, 신흥국 모두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합된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상황에 대해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 예일대 교수는 2014년 9월 13일자 『가디언』지의 기고에서 심각하게 경고했다.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불황이 8년 후인 1937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진정한 회복은 6,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이후에야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황이 1937년과 유사한 점은 “무엇보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기회복 수준에 실망하고 있으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벌들 가운데 부실화되거나 부실징후를 보이는 재벌 수

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sup>(11)</sup> 2013년 공정위가 지정한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집단 8개와 금융그룹 4개를 제외한 50개 그룹 가운데 4개 그룹(금호아시아나, STX, 웅진, 동양)은 이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중이고, 2012년 기준 10개 그룹(한진, 동부, 현대, 효성, 한국지엠, 동국제강, 코오롱, 대성, 한라)이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이다. 이런 부실징후 그룹 수는 2010년 2개, 2011년 5개, 2012년 10개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지구적 자본주의는 2008년 세계금융공황 못지않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다시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도 1997년 IMF사태 못지않은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후처럼 빨리 회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통화팽창 정책에 의해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한 덕분에 한국경제는 세계금융공황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가올 세계경제위기에서는 중국경제도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도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1/4이 넘고 금융과 관광산업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부도나거나 부실화된 재벌 대기업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해서 구제하고 사후에 다시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국유화함으로써 재벌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른바 ‘대마불사’론을 폐기하면 가능하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 때 유럽과 미국에서 각국 정부는 부도위기에 몰린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을 실제로든 사실상으로도든 국유화해서 구제했고 나중에 사유화했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대은행들과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등 초국적 대기업이 그러했다.<sup>(12)</sup> 이처럼 국유화된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다시 사유화하지 않고 국유화를 계속

(11) 이수정 외(20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3, 14.

(12) 프랑스에서는 대위기가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 1982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르노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후 국민세금을 투입해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 대기업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나중에 다시 사유화했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은행의 국유화는 자본주의체제에서도 그렇게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 필요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유지하면서 관리도 사회화함으로써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관리는 대기업의 조건과 노동계급의 주체역량에 맞게 낮은 수준의 경영참여로부터 공동경영, 노동자자주관리 등으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면 된다.

대기업에 대한 사회화의 필요성은 낮은 수준에서는 그동안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로 널리 제기되어 왔다. 대기업에서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 하청중소기업, 소비자, 시민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존중될 필요성과 그것을 확보할 소유·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화는 이런 필요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킨다. 그럼으로써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충분하게 대기업을 사회적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벌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는 위기대응책일 뿐 아니라, 재벌이 온갖 특혜와 부정비리 및 투기 등에 의해 형성되고 압축적으로 성장한 역사적 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국민재산인 재벌 기업”<sup>(13)</sup>의 사회화이기 때문에 명분과 정당성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경상대·성공회대 정치경제학 강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E-mail: parksh0517@hanmail.net

---

(13) 김기원, *ibid.*, p.26.

